

학생자치 삼권분립 & 탄핵제도 도입 제안

◆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 위치한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칙에서 학생회장이 자동적으로 대의원회 의장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회는 행정부, 대의원회는 입법부의 개념으로 접근 할수 있는데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장을 겸직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위배 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을 양성 해야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대의원회의 대의원들 조차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많은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자치가 아닌 학생회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장과 부반장은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에서 학생회가 각반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의원회의 대의원회의를 학생회에서 주관하고 주최하고 있으며 회의 진행 또한 대부분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진행하고 있고 대의원들의 주체적인 활동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학생회 중심으로 학생자치이 이루어지는 현실인데, 하나의 학생자치기구로만 학생자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 학생자치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답게, 학교에서 진정한 학생자치이 운영 되려면 소수의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한적 학생자치이 아닌 학교의 주인인 모든 학생이 직접 다스리는 개방적인 학생자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학생회에서 학생자치 활동을 진행 해 보려고 하더라도 학생회에게 주어진 예산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200만원 내외입니다. 예산이 별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활동도 진취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 하기에 힘이 든 상황입니다.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건의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점이 있더라도 학교 내에서 이것을 해결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시도의 교육감님과 학생대표로서 논의하고 이야기 할수 있는 “학생의회” 가 설립 되어 있지 않다보니 교육을 담당 하시는 교육감 님과 학생자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있어서 근본적인 학생자치의 문제는 개선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학생회장과 부회장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들을 선출 할수 있는 투표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직무 유기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을 심판할수 있는 제도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촛불을 통해 잘못된 권력자의 탄핵을 이끌었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에는 탄핵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자치의 토대와 학생회 법제화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학교내에서 학생자치가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실현 해 나가는 질적인 발전 또한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학교에서 공론화 하고 추진 해 나가 고자 하는 내용들을 학생회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안 드립니다.

◆ 제안 내용

1. 학생자치 삼권분립

학생자치기구를 입법부(대의원회), 행정부(학생자치회), 사법부(학생자치법원)로 규정하 여서 각 기구들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학생자치 라는 가치를 실현한다.

- 입법부(대의원회)

반장, 부반장이 대의원으로 규정되고,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 내에서 학년에 상관 없이 호선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대의원회의 대의원들은 기존의 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에서 벗어나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대의원회를 운영한다.

□ 대의원회를 모의국회 방식을 적용하여 각 대의원들은 각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 여서 위원으로서 학생자치 활동을 주체적으로 할수 있다.

ex) 학생복지위원회, 교내환경위원회, 학생주권위원회 등

□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활동에 대해서 감시할수 있으며 학기 말 마다 국회의 국정조 사와 같은 학정조사를 통해서 학생회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 받고 잘못 된 점은 개선 할수 있는 견제의 기능을 부여 받는다.

□ 대의원회는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임명하고자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인사 청문회를 실시 할수 있다.

□ 대의원회는 학생회의 임원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발생 할시 탄핵 소추안을 발의 및 의결 할수 있다.

- 사법부(학생자치법원)

학생자치법원의 법관들은 지원 or 선출하여 구성한다.

□ 학생자치법원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학생자치 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각 or 인용에 대한 여부를 심판 할수 있다.

□ 학생자치법원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벌점제도에 대해서 억울한 상황을 가진 학생이 발생 될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최종변론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린다.

- 학생자치법원은 2심제로 운영된다.
- 학생자치법원에 교내 선도부와 교사들은 학생 벌점 부과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기소권 행사를 한다. 기소된 사항에 대해서 법관들이 판결을 내린다.
- 기존에는 선도부와 교사들의 판단이었다면 이제는 기소권 행사를 실시함.

- 행정부(학생자치회)

기존에 학생회장을 선출 하는 것 그대로 진행 한다.

- 학생회의 역할과 기능은 기존 학생자치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회의 역할 그대로 진행 된다.

◆ 학생자치 삼권분립 & 탄핵제도 기대효과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흔히 학교는 한 사회라고 불리며 민주시민을 양성 하는 교육기관이라 칭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민주주의 핵심적 가치인 삼권분립의 형태를 각 학교에서 구현하지 못 하였고 학생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을 겸직하고 반장,부반장은 학생회 중심의 학생자치에서 학생회의 알리미 역할을 하는등 겉만 학생자치인 학생자치가 실현되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학생자치 삼권분립을 통해서 대의원회에 모의국회 방식을 적용하고 각 학급의 학급임원들이 주체적으로 학생자치의 한 축으로서 활동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됨으로서 진정한 교내 민주주의를 확립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교내에서 경험함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성인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행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왜 잘못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인지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학생자치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투표권만 존재하였고 그들이 학생자치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직무유기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통제 하고 견제 할수 있는 제도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탄핵제도 도입을 통해서 견제 할수 있는 제도적 통제장치가 마련됨으로서 소위 인기투표라 비판 받던 교내 학생자치 임원에 대한 선거가 “정책 선거” 와 “인물 선거” 로 탈 바꿈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교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학생자치기구의 삼권분립을 통한 올바른 역할 정립이 학생회 법제화와 더불어서 국회에서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